문 1. 현행 「지방자치법」상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시·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구성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.
④ 협의회 회장과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문 2. 재정자주도의 산출 공식에서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항은?

① 세외수입 ② 지방교부세
③ 조정교부금 ④ 국고보조금

문 3. 현행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게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 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당사자로 한다.
④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문 4. 현행 「지방공무원법」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②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없다.
③ 현직 법관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.
④ 위촉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.

문 5.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행정기관형의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.
② 현행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하면, 지방공기업에는 지방공사, 지방공단과 지방직영기업이 있다.
③ 지방공사는 민관합동의 여지가 있다.
④ 지방공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위탁한 기능만을 처리할 수 있다.

문 6.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이다.
② 통상적으로 부수적인 조건이 붙거나 분담금(matching fund)이 요구되지 않는다.
③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,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.
④ 현행 「지방교부세법」에서는 교부세의 종류로 보통교부세, 특별교부세,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. ③
·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.
2. ④
· 재정자주도 분자에는 자주재원(지방세, 세외수입)과 의존재원 중 용도제한이 없는 일반재원(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)이 포함
3. ②
· 지방자치법 제140조: 사용료 등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음.

정답 및 해설

4. ①
·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: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음.
·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: 법관·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·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7항: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음.
5. ④
· 선지 ④는 지방공단에 대한 설명으로,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과 관계없이 업무영역 확장 가능
6. ③
·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 산식의 분모에만 포함 되므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짐. 반면에 재정자주도 분자, 분모에 모두 포함되지만 분자에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므로, 지방교부세 지원이 확대하면 재정자주도는 높아짐.

문 7.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, 나타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시·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·군·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ㄴ. 지방자치단체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ㄷ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(ㄴ)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ㄹ.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(訴)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직접 제소할 수 없다.

① ㄱ ② ㄱ, ㄴ
③ ㄱ, ㄴ, ㄷ ④ ㄱ, ㄴ, ㄷ, ㄹ

문 8. 라이트(Wright)의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동등권위형(coordinate model)은 연방정부와 주정부,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,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한으로 침해될 수 없는 형태이다.
② 내포권위형(inclusive model)은 주정부가 연방정부 아래 놓여 있는 상황으로, 권한의 범위도 연방정부가 가장 넓고 다음이 주정부, 지방정부순인 형태이다.
③ 중첩권위형(overlapping model)은 연방. 주.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분산되어 있으며, 세 정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다.
④ 라이트(Wright)는 중첩권위형 모델이 미국 연방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.

정답 및 해설
7. ①
·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가 있으면…
·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·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: 주무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…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.
8. ①
· 동등권위형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관계에서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,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는 형태임.

문 9.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권한 중 선결처분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
ㄴ.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
ㄷ.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
ㄹ.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

① ㄱ ② ㄱ, ㄴ
③ ㄱ, ㄴ, ㄷ ④ ㄱ, ㄴ, ㄷ, ㄹ

문 10.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하나의 시·도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·도의원 정수는 1명이다.
② 하나의 시·군·자치구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·군·자치구의원 정수는 2인 이상 5인 이하이다.
③ 시·군·자치구의 지역구 시·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.
④ 시·군·자치구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한다.

문 11. 지방행정계층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묶음만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ㄱ. 경상북도 문경시 -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
ㄴ. 서울특별시 동작구 - 경상북도 울릉군
ㄷ. 경기도 수원시 - 세종특별자치시
ㄹ.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- 대전광역시 유성구

① ㄱ, ㄷ ② ㄷ, ㄹ
③ ㄱ, ㄷ, ㄹ ④ ㄴ, ㄷ, ㄹ

정답 및 해설
9. ②
·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(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)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(先決處分)을 할 수 있음.
10. ②
· 공직선거법 제26조: 지역구 시·군·구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
11. ③
· 광역 지방자치단체: 세종특별자치시
· 기초 지방자치단체: 문경시, 동작구, 울릉군, 수원시, 유성구
· 행정구 및 행정시: 제주시, 수지구

문 12.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유급보좌관제 도입
② 전문위원의 확대
③ 수석행정관제 도입
④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

문 13. 현행 「지방공무원법」상 공무원의 결원 보충방법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신규임용 ㄴ. 승진임용 ㄷ. 전직 ㄹ. 전보 ㅁ. 강임

① ㄱ, ㄴ　　② ㄱ, ㄴ, ㄷ
③ ㄱ, ㄴ, ㄷ, ㄹ　　④ ㄱ, ㄴ, ㄷ, ㄹ, ㅁ

문 14. 현행 「지방자치법」상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감사청구인의 연령 제한은 없다.
②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.
③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.
④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.

문 15.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모든 광역시와 도의 부단체장 정수는 2명 이내이다.
② 특별시의 부단체장 정수는 3명 이내이다.
③ 시, 군,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임명한다.
④ 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문 16.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한다.
②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.
③ 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 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, 세외수입(재산매각수입 제외), 지방교부세, 재정보전금 등의 추계액으로 한다.
④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문 17. 현행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부담금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권
②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청권
③ 주민소환투표 청구권
④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권

정답 및 해설

12. ③
· 수석행정관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

13. ④
· 지방공무원법 제26조: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·승진임용·강임·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함.

14. ③
· 지방자치법 제16조
- 19세 이상의 주민
- 시·도: 주무장관에게, 시·군·구: 시·도지사에게
-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, 공표하여야 함.

정답 및 해설

15. ①
·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: 부단체장 정수는 서울특별시: 3명, 그 외의 시·도는 2명으로 하되 인구 800만 이상은 3명(경기도: 3명)

16. ④
·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
-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: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
-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: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

17. ①
·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(청구대상의 제외)
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문 18.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보충성의 원칙-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의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

② 효율성의 원칙 - 사무배분에 있어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히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

③ 현지성의 원칙-지역사회에 가깝고 주민의 통제가 용이한 정부에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

④ 충분재정의 원칙-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재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

문 19.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 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① 서면 이행명령 ② 대집행

③ 재정 불이익 조치 ④ 정지권

문 20.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건국 초기부터 1961년 「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」이 시행되기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읍(邑)·면(面)을 기초지방정부로 두고 있었다.

②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는 단층제로 전환되었다.

③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「지방자치법」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3층제를 이룰 수 있다.

④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계층을 법률에 획일적으로 정함에 따라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.

정답 및 해설

18. ②

· 포괄성의 원칙: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함.

19. ④

·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: …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음.

·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: …대집행하거나 행정상·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.

20. ③

·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: …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음.(자치구가 아니므로 자치계층은 2층제)